

건강 칼럼

첩약(탕제 한약) 의료 보험

한약은 각각의 기준에 따라 분류하면 수많은 종류가 있다.

그 중에서도 경구 투여 (입을 통해 복용하는) 한약의 종류를 모양이나 형태에 따라 분류하면 이 또한 여러 종류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환제 한약, 산제 한약, 탕제 한약을 들 수 있다.

환제 한약은 청심환 공진단 처럼 씹어 먹을 수 있는 고체 덩어리 형태의 한약으로 약 이름의 끝 음절이 주로 ~환, ~단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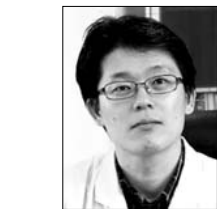
산제 한약은 일종의 가루 형태 한약으로 대부분 대량생산이 이뤄지기 때문에 제약회사에서 만들어진다.

산제 한약은 모든 약이 제약회사 공장에서 만들어 지는 양약과 비슷하다.

탕제 한약 일명 첩약은 액체상태의 한약으로 한의원 한방병원 또는 그 부속 전문 탕전원에서 조제된다.

환제 한약이나 산제 한약은 이미 조제돼 있어 한의사가 환자를 진찰하고 그에 맞는 환제 또는 산제 한약을 처방한다.

첩약은 이와 달리 이미 만들어진 약을 처방하는 게 아니라 환자 진



김이곤

광우한의원장

찰한 후 그 환자에 맞는 한약재를 의료기관에서 직접 구성해 그 환자에게 최상의 치료 효과를 내기 위해 조제되는 개인 맞춤 한약이다.

따라서 진찰하기 전에 미리 만들어 놓을 수 없고 진찰 후에도 조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바로 지급할 수 없다.

또한 그 환자 개인에 맞는 유일한 한약이기 때문에 비용 또한 일반적인 다른 형태의 한약보다 비싼 편이다.

일부 산제 한약은 건강보험이 적용돼 있으나 첩약은 현재까지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개인 맞춤 한약인 첩약을 복용하고 싶어도 비용적인 부담이 적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첩약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주한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에 대한 최종 보고서가 지난 1일 공개됐다.

이 보고서는 연구 진행배경 설명과 함께 국내외 첩약 조제현황과 관련 제도의 조사·분석, 첩약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쟁점사항 도출 및 해결방안, 첩약의 단계적 적용 및 시범사업 방안 등의 내용이 보고됐다.

첩약의 건강보험 급여화는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부분으로 첩약의 만족도에 대해서는 외래환자 93.1%와 입원환자 95.4%가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바 있다.

또한 첩약의 이용 목적도 국민 대다수가 질환 치료를 위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반국민의 84.2%(2017년)가 비싸다고 생각하는 치료법으로 첩약을 지복하는 등 경제적인 원인으로 인해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향후 한의의료 분야의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고가의 진료비(2014년, 40.9%)와 보험급여 적용 확대(2017년, 45.7%)가 선정되는 등 첩약 급여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지속돼 왔다.

현재 첩약 급여는 국내는 공적 보험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공무원특수요양비에서 첩약 정책 지불방식으로 급여되고 있다.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다.

국외는 중국과 일본에서 각각 1995년, 1961년에 급여화가 적용되고 있다.

추나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확정과는 달리 아직은 연구 검토 단계이나 향후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은 첩약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설 전북 지역이 쓰레기 매립장인가

전북도는 정신을 차려야겠다. 지금 전북도에 하고 싶은 말은 분명하다. 제발 정신 좀 차려야겠다. 말로만 자존을 말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전북도가 바보스러워도 이 정도로 바보스러운지는 몰랐다. 말끝마다 우리 지역이 청정 지역이라고 되뇌었지만 말짱 거짓말이라는 게 이번엔 드러났다. 타 지역에서 모여든 각종 폐기물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도 그것을 여태 방관했다니 한심하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렇지 외지의 쓰레기를 반입하다니 보도되는 뉴스를 보고 분노가 치민다.

지금 전북도에 촉구할 말은 분명하다. 말로만 재물을 핑계 지 말고 말로만 자존을 강조하지 말라. 타 지역의 쓰레기나 반입하는 주체에 무슨 재주 찾기고 무슨 자존심 강조란 말인가. 지역 발전에 보통 이상의 힘을 쏟아줬다고 주둔한 결과가 오늘날 이런 것이냐니 너무나 허탈하다.

전북도더러 정신을 차려야겠다. 말을 과거와 같은 정도로 받아들이는 안 된다. 도민들이 분기 맹천하여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도민의 마음을 하나로 결집해 발전 방향을 선도해야 한다. 도지사를 비롯해 고위 관계자들은 지역 발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야 한다. 결국 말하고 싶은 것은 도민의 열망에 부응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전북도는 도민의 분노에 고개 숙여야 한다.

다들 목도하는대로 우리 지역은 발전상이 시원치 않다. 그런데 다른 지역의 쓰레기까지 반입하는 신세로 전락했다니 도저히 견딜 수 없다. 다른 광역시도가 낱이 발전하고 있을 때 우리 지역만 뒤처진 채로 있는 것도 서러운데 황금마저 더러워지고 있다는 것은 도대체 말이 안된다.

도내에는 전국에서도 가장 심각한 발암 지역인 두 군데가 아니다. 익산의 잠정 마을과 남원의 내기 마을은 분명히 점검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주민들 태반이 암이 발병해 죽어갔기 때문이다. 이번엔 분노의 대상이 된 군산과 일실은 물론이고 도지사과 고위 관계자들은 쓰레기 반입 문제에 심각하게 대처해야 한다.

도민의 분노를 가라 앉히려려 청정 지역 회복 운동이라도 벌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독자제언

인도(人道)침범 사고, 처벌대상입니다

길을 걷다 보면 인도로 불속 들어오는 차량 때문에 화들짝 놀란 경험 있을 것이다.

보행자들은 인도로 차량이 접근할 거라곤 생각지도 못하다보니, 인도로서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난다.

최근 5년간 보행자가 인도를 통행하다 일어난 교통사고는 전국에서 4931건, 이 중 93명이 숨졌고, 5343명이 다쳐 연간 사상자가 천 명이 넘는다는

차가 인도로서 사람을 치는 경우는 인도 턱을 낮춘 주차장·주유소 등의 진출입로, 주요 간선도로와 건물을 빌려놓은 건축후퇴공간 주변에서 주로 발생한다.

차량 진출입로, 건축후퇴공간 등 차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 생각하여 차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엄연히 인도이다.

때문에 이곳에서 일어난 운전자의

사고책임은 줄지 않는다. 자동차 인도침범 사고는 자동차가 뛰어드는 인도돌진, 인도로 올라서 주행하는 인도주행, 진출입로 등을 기로 지르는 인도횡단 등이다.

인도침범 사고는 뺑소니나 음주측정 거부 수준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상 12대 중과실 사고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그러나 인도로 침범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운전자가 많아 보행자가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이런 사고를 예방하려면 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 같은 안전 시설물을 인도에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항상 인도에서는 보행자가 우선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김민지 남원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발렌타인데이 맞아 어린이집 찾은 멜라니아



트럼프 대통령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발렌타인데이를 축하하기 위해 14일(현지시간) 워싱턴 인근 메릴랜드주 베데스다의 국립보건원 내 어린이집(Children's Inn)을 찾아 한 어린이와 애기하고 있다.

인구 감소 문제 일자리가 답이다

전북도는 일자리 확보를 통해 인구 감소를 막겠다고 밝힌 적이 있다. 그것은 틀린 중 박근혜 소식이 아닐 수 없었다. 일자리 대책을 강구하려나보다 싶어 갖게 된 반응이다. 그런데 지금의 현실을 보면 아직도 어두운 것 천지다.도내 취업률이 여전히 전국 꼴찌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이마를 짚어야겠다. 경제신호등이 늘 빨간불인데 청년실업률이 심각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나가 말이다. 이 부끄러운 기록을 얼마나 더 견뎌야 할 것인지 난감한 나날이다.

청년 일자리에 관심을 갖고 대책을 강구해야 할 오늘이 아닐 수 없다.여전히 도내 고용동향을 보면 답답할 뿐이다. 이래서는 곤란하다. 전북도는 먼저 출산수범하는 자세로 지역 인재 고용의 사례를 많이 보여줘야겠다. 전북 지역의 청년 고용 열기가 달아오르지 않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도내 취업률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 현저히 떨어지는데도 어떻게 끌어 올려 보려는 움직임이 둔하니 왜 그런지 알 수가 없

다. 전북도와 각 시군 지자체는 고용 열기를 더 달구어야 한다. 이미 오래전부터 수차례 언급했더니와 전북도는 도내의 많은 젊은 이들이 아직도 미취업자로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고용 현실이 전국에서도 밑바닥 수준이라는 지적이 괜한 것이 아니다. 전북도와 군산시와 각 지자체는 실업자 증가의 현실을 똑바로 보아야 한다. 실업자 증가의 내용을 들여다 보면 전북도가 파악한 그 이상으로 심각하다. 그렇기에 도민들은 여전히 희망을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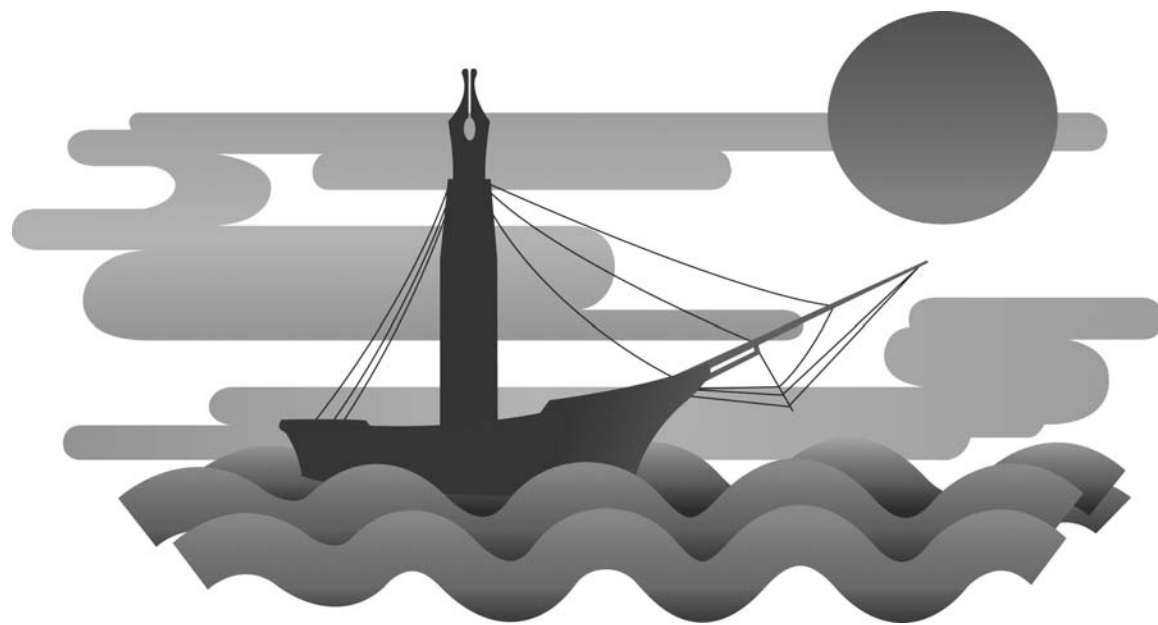
일자리 창출은 한두 번 시도해 보고 그만 둘 게 아니다.전북도가 인식하고 있는 그대로 인구 감소는 일자리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다. 그리고 공공기업들의 협조도 필수적이다. 전북도는 다른 지자체와 비교 당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을 터이다. 전북도는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갈수록 뒤처지고 있는 참담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제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이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